‘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가 최적지”

과기부 오늘 공모 마감…이달 최종 부지 발표 예정
전남도·나주시 “미래산업 구조 바꿀 역사적 전환점”

전남도가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나주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12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가 13일 마감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4~20일 사전 실무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 등 연료를 플라스마 상태에서 1억도 이상의 초고온으로 가열해 원자핵을 융합함으로써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와 유사해 인공태양으로도 불린다.

이론적으로는 핵융합 연료인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온실가스나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이 거의 없어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이번 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공모의 평가 항목은 기본 요건(40점), 입지 조건(50점), 정책 부합성(10점) 등 3개다.

전남도는 후보지인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 국가산단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인 점과 최근 20년간 규모 3.0 이상 지진도 없었던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필수 조건인 50만㎡ 이상의 편평한 부지와 4차선 이상 진입로, 250MVA 전력 인입선로 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전력 본사와 670여개 전력 기자재 기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등 산학연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20차례 이상 주민설명회와 전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 수용이 높게 형성된 점도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특히 전남도와 나주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유치 열기도 뜨겁다.

나주시민과 시민단체 등은 나주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연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무안·장흥 등 전남지역 지자체들도 전남 유치 피켓 챌린지 동참하는 등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전남도와 나주시는 “탁월한 핵융합 연구 기반이 조성돼 있는 나주가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현장실사와 발표를 준비 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전남의 미래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역사적 전환점이 될 사업”이라며 “전남이 최적지임을 입증하도록 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총 1조2000억이 투입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2027년 착공해 2036년 완공 예정이다. 선정 지역엔 3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최대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10조원 이상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에서 박미경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사 318일 만에…‘12·29 여객기참사 추모위’ 닻올렸다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 상임대표 등 위촉장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에 1327억원 투입

지난해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기리는 위원회가 참사 318일 만인 12일 닻을 올렸다.

‘12·29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추모위는 지난 6월 시행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20인 이내의 위원(당연직 10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추모위 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함께 추모위를 이끌어 갈 민간위원장에 임명된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모위에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10명의 전문가도 이날 위촉장을 받았다.

임태호 천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찬영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교육부위원장, 노경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유해정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 최완욱 광주인권지기 활짝 대표, 박성기 서울과기대 건축학과 교수, 박용진 청운대 산학협력단 지역협력센터장, 마동욱 도화엔지니어링 전무, 김유진 제주항공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이다.

당연직 위원은 김 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모두 10명이다.

김 총리는 추모위 위촉식에서 “참사 후 1년의 시간이 지났다.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도 고통이 다 가겠나”라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관계 부처는 지원, 절차 등을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추모위는 △피해자 확인과 생활지원·심리상담·치유휴직·교육 등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등 추모사업 △재단 및 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피해지원·추모위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결에 앞서 정부가 마련한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예산안은 국비 1073억원을 비롯해 모두 1327억원이다. 타 국제공항 연계상품 운영 교통비지원 등 피해 관광업계지원사업에 44억원, 무안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주민지원사업에 122억원, 국도 2호선 진입도로 신설 등 관광문화기반마련 사업에 1161억원이다.

한편 여야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해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조만간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거쳐 특위를 조만간 본격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AI산업 규제프리 실증도시 조성”

강기정 시장, 하정우 수석과 ‘AI산업 추진전략’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 수석을 만나 광주 전역을 ‘AI산업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AI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기업유치를 기반으로 AI실증도시로 발전해 왔다. 이제는 도시 전체를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전환해 NPU, AI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실증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광주 전체를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정우 수석은 ‘규제프리 실증도시 조성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광주가 그동안 축적한 AI산업 생태계를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하 수석은 또 지난 10월 국가 AI컴퓨팅센터 공모와 관련해 “민간영역으로 개입 여지가 크지 않았지만, 광주가 노력해 구축해온 AI산업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광주를 AI산업의 중심이자 AI선도도시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특히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AX 시티와 6G, 한국형 미래도시 포럼’에서 강기정 시장이 제시한 NPU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국가AI연구소 광주 설립, AI+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등 ‘AI 실증도시 광주’ 4대 전략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강 시장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포함해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광주가 대한민국 AI산업을 선도하는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27일 누리호 4차 발사…고흥 나로우주센터

0시 54분~1시 14분 사이 첫 새벽 비행 도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27일 새벽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4차 발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체를 쏘는 것은 지난 2023년 5월에 이어 약 2년 반 만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새벽 시간대에 수행하는 발사이며, 민간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업체 관리부터 단조립, 전기체 조립 등 제작 전 과정을 주관해 수행하는 첫 발사다.

1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누리호는 27일 오전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에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이번 발사에는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함께 민간 큐브위성 등 부탑재위성 12기가 탑재된다.

발사대로 옮겨지는 누리호 4차 비행모델

누리호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제작된 첫 발사체다. 4차 발사의 경우 차세대소형위성을 실은 3차 발사와 달리 중형위성을 실었고, 큐브위성 수도 늘어 총 탑재 중량이 960㎏으로 늘었고, 목표 고도도 550㎞에서 600㎞로 높아졌다. 연합뉴스

광주 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 개설 ‘거북이 걸음’

광주시도시계획위 “안전성 검토 필요” 재심의 결정
내년 착공 등 차질…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 예정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지산나들목(IC) 진출로 개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가 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해 준공하고도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개통하지 못하고 위치를 바꿔 추진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IC 개설 공사(1단계)에 대해 운영속도, 차로 폭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사유로 재심의 의결됐다.

도시계획위는 터널과 진출입로 간 거리가 짧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과 도로폭을 3.5m에서 3.2m로 축소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90㎞에서 80㎞로 줄이는 것 등에 대해 안전성을 우려했다.

도시계획위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방안과 시민 불편·혼선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설계 대안 및 제2순환도로 기능 유지 방안 검토, 진출로 개설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지산IC 진출로는 지산유원지 활성화와 무등산 관광객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8년 9월 공사가 시작됐다.

총 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한 폭 6.5m, 길이 670m 도로는 설계·보상은 광주시가, 공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서 맡았으며 2021년 11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안전성 논란에 개통 직전 진출로는 차단됐다.

제2순환도로 진출로가 전부 우측인데도 이곳만 운전자들에게 낯선 좌측인데다가 터널과 이격거리도 17m로 짧아 사고 우려가 큰 것이 원인이었다.

민선 8기 들어 시는 안전성 등을 검토한 끝에 진출로를 애초 고려됐던 우측으로 바꿔 활용하기로 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좌측 진출로는 도로를 높여 차량 진행 차로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재개설 사업비는 기존 77억원에다가 149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재설계를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재해영향성 검토 사전검토의견 협의, 도시관리계획 시설 입안서류 보완 제출, 주민의견청취와 공람공고, 재해 등 관련분야 협의 등을 마무리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실시 설시계획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분야 협의를 거쳐 연말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후 내년 2분기 1단계 진출로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인가 절차 진행은 물론, 실제 사업 착공까지도 불확실해졌다.

광주시는 논란이 된 안전성 문제를 보완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계획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시는 안전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완 자료를 추가 제출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다시 받을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안전문제가 도시계획위에서 제기됐다”며 “안전성을 입증할 객관적 데이터를 다시 제출해 심의위원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면 ‘분양가 전쟁’서 계속

지역 내 또 다른 사업지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은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이 잇따라 발을 빼며 표류 중이다. 분양가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과 건설사 모두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 시점의 광주 분양시장이 이 같은 ‘고분양가 전략’을 받아들일 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를 보면 광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022년 12월 291가구에서 올해 9월 기준 1365가구를 넘어섰다.

더욱이 지역 내 공급 예정 물량이 2년간 1만37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급 폭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광주 재개발사업의 분양가 갈등이 단순한 ‘가격 싸움’이 아니라 지역 주택공급 구조의 불균형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조합의 기대이익보다 수요자의 구매력에 맞춘 합리적 분양가 산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분양가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질수록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보다 시장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고분양가를 밀어붙이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광주의 재개발 시장은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